광주·전남 산재 피해자들이 뭉치는 까닭은

고통 나누고 일터 안전하게…전남노동권익센터, 지역 첫 자조모임 결성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미승인 산재 노동자·유가족 등 누구나 참여 가능
지난해 지역 산재 1만6천여명…멘토링 등 트라우마 극복하고 정보 공유

#.A(33)씨는 최근 산업재해를 입고도 끝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다. 장성군의 한 사업장에서 입사 3개월만에 부상을 입은 A씨는 회사로부터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산재 처리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온다며 못 하게 했다"며 "회사 눈치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산재 신청을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B(55)씨는 14년간 반복적인 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다 광양제철소의 한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지난해 10월 부비동암(코곁굴암)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냈다. 이 때 회사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산재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는데, B씨는 어떻게 피해를 입증해야 할지 몰라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노동자 지원 시설, 지인 등 사방으로 도움을 요청한 끝에 겨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C(39)씨는 지난해 10월 순천 율촌산단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목 부위를 다쳤다. 고개를 돌리는 일조차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외부 활동조차 꺼려지는 등 후유증이 남았지만, 도움을 받을 방법을 몰라 수개월을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다. C씨는 결국 심리지원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한 뒤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정규직·일용직·협력업체 노동자의 경우 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대다수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 힘을 합친다는 건 더욱 어려웠다는 것이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혼자 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무력감을 느꼈다는 것이 산재 피해자들의 이야기다.

산재로 인해 복합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광주·전남 최초의 산재 피해자 중심의 민간 자조모임이 만들어진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나누고 정신적 회복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산업재해자는 1만6075명. 이 중 사망자는 245명에 달했다. 지난 2023년에도 1만487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고 206명이 숨졌다. 이런데도, 대기업과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단, 국가 산단 등이 밀집한 광양·순천 등 지역에 실질적인 피해자 네트워크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산재 경험을 공유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 피해자 모임 결성에 나서게 됐다. 참여 대상은 산재 경험자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미승인 산재 노동자 ▲산재 유가족 ▲직업병 피해자 ▲산업안전에 관심 있는 노동자 누구나 가능하다.

센터는 자조모임의 활성화와 초기 정착을 위해 ▲산재 경험자 멘토링 시스템 ▲노무사 연계 무료 상담 프로그램 ▲산업재해 스트레스·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등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20일부터 모임 결성 취지를 알리면서 오는 6월 9일까지 '산재 피해자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모임을 계기로 광주·전남 산업재해 피해자들 뿐 아니라 전국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등과도 교류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어디에도 갈 데 없고, 말할 데가 없어 마음속으로 앓고 있던 분들이 이번 공고 이후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며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금호타이어 화재 76시간만에 완진

연기 피해 감안 건물 해체 결정…노조, 원인 규명·생계 대책 요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76여시간 만에 완진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까지도 붕괴 위험을 들어 진입을 통제하고 '완진'까지 한 달이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했다가 이날 새벽 인력을 투입한 데 이어 중장비를 투입, 건물을 부수고 화재 진압 속도를 높이면서 모두 진화했다. '지역 주민들이 매캐한 연기·냄새로 오래도록 고통받을 수 있다'는 환경청 등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말이 나온다.

광주소방본부는 20일 오전 11시 50분을 기해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전날까지 건물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화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새벽 4시 30분께 건물 내부로 들어가 잔불의 열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새벽 6시부터 내부 진화작업을 재개했다.

이어 1시간 40분만에 내부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뒤 재발화 여부를 지켜보고 완진 판단을 내렸다. 지난 17일 오전 7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한 지 화재 발생 이후 76시간 39분(3일 4시간 39분)만이다.

소방당국은 "남아있던 고무류가 자체적으로 타면서 에너지를 소진해 꺼질 수는 있지만, 공기 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발화지점을 제외하고는 건물을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금호타이어 '2공장' 내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이 집중된 구역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추정했다. 이 불로 공장 전체 23만㎡ 중 14만 925㎡가 불에 탔다.

화재로 20대 근로자 1명이 공장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2명도 화상을 입었다.

타이어 원재료 등이 불에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화재는 사전에 예방했어야 할 인재"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광산구도 입장문을 내고 "금호타이어는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피해 보상 로드맵을 밝히고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외국인도 함께 한 '민주기사의 날'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택시 행렬 앞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기사의 날은 택시기사들이 1980년 5월 차량 시위를 재현하며 광주시 북구 옛 무등경기장에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행진하는 행사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귀가 주민 피해·불편 호소에…대피소 운영 재개

광주시 광산구가 운영을 종료했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임시 대피소 운영을 재개했다. 대피 중인 주민들을 섣불리 귀가시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 불만이 속출하자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2차 임시 대피소를 설치하고 의료·식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광산구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 오후부터 임시 대피소를 운영했다가 이틀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하지만 귀가 조처가 이뤄진 뒤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광산구 설명이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주민 피해는 모두 2177건(인적 피해 1102건)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2차 임시대피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건희 무혐의 종결'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조 차장은 이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등이 대선 이후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연합뉴스